



| | | | | |
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 | | 보 도 자 료 | | 수도권매립지 종료  |
| 배포일자 | | 2022년 2월 18일(금) 총 5매 | | |
| 담당 부서 농축산유통과 | 담 당 자 • 도시농업팀장 김지숙 ☎440-4431 • 담당자 백소연 ☎440-4434 | | | |
| 사진(이미지) |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 | 참고자료 |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 | |
| 보 도 시 점 |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 | |

인천시-aT, 저탄소 식생활 확산위한 업무협약 체결 - 인천시 ·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, 저탄소친환경 식생활 문화 확산 협력 -

인천광역시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18일, 시청 접견실에서 저탄소 친환경 식생활 문화확산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
이번 협약은 저탄소 식생활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* 캠페인 확산, 로컬푸드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협력, 기후위기 인식 개선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 등을 협력키 위해 마련됐다.

* 우리 지역의 저탄소·친환경 농식품 중심의 식사를 준비 후 건강한 한 끼를 남김없이 먹는 날

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‘코리아 그린푸드 데이’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먹거리종합계획과도 많은 연관성이 있어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인천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.

또한, 푸드플랜과 로컬푸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시와 로컬푸

드 및 푸드플랜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는 공사가 협업하여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박남춘 인천시장은 “탄소중립을 위한 생활실천은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저탄소 식생활 확산 및 로컬푸드 운동에 박차를 가해 농식품분야 탄소 중립 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겠다”고 밝혔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1시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인천시 인터넷방송’(<http://tv.incheon.go.kr/>) ‘포토인천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
<참고> 협약서(안)

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

인천광역시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인천광역시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이하 ‘협약기관’이라 한다.)의 전문성을 활용하여, 환경·동반성장·윤리 등 지속가능경영(Environment, Social, Governance. 이하 “ESG”라 한다)가치를 확산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분야) 협약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.

1.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‘코리아 그린푸드데이’ 추진 및 대국민 홍보 등 ESG 가치 실천
2. 로컬푸드 등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생 실천
3. 기후위기 인식 개선과 탄소중립 생활실천 촉진
4. 그 밖에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3조(협약기간) 본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2년간 유효하며 서면합의에 의하여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.

제4조(협약이행) 협력사업 수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협약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고,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5조(분쟁의 해결) 본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상호협력에 의해서 우호적으로 해결하며 제3자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.

제6조(비밀유지 의무) 협약기관은 상호 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기밀사항 및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아니한다. 다만 감독기관이나 상급기관, 국회 등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7조(협약의 해제·해지) 양 기관은 대내외적으로 본 업무협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본 업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서면으로 상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법적 구속력) 이 양해각서는 제6조(비밀유지)를 제외하고 법적으로 협약당사자들을 구속하지 아니한다.

협약기관은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협약기관의 대표자가 서명·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2년 2월 18일



시 장 박 남 춘



시 장 김 춘 진